

칼럼

김 화 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 독일 전기차의 성지 츠비카우

독일 중동부의 인구 9만 소도시 츠비카우(Zwickau)는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이 태어나 자란 곳이다. 츠비카우는 독일 자동차 산업 역사에서 가지는 의미도 작지 않다. 1909년에 역사상 최초로 좌측 운전대 차량을 제작했던 아우디가 츠비카우에서 출범했다.

이전에는 석탄 광산촌이었다. 2차대전 후 아우디는 서독의 잉골슈타트로 이전했고 구동축은 1958년부터 27톤 플라스틱체 소형차 트라반트를 츠비카우의 구 아우디 공장에서 생산했다. 트라반트는 구동축 경제 낙후성의 상징물로 1990년 독일 통일 후 쓰레기통에 버려졌고 폭스바겐이 츠비카우에 새 공장을 지었다.

지난 2020년 6월 30일은 츠비카우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날이었다. 1990년부터 30년간 총 6,049,207대의 자동차를 생산했던 폭스바겐 츠비카우 공장이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완전히 중단한 것이다. 향후 츠비카우 공

장은 전기자동차만 생산하게 된다. 독일에서 전기차 전용으로 전환된 첫 대형 공장이다. 8천여 명의 종업원들은 재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기차 생산인력으로 거듭나게 되고 2021년부터 연 3만 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폭스바겐은 전기차 회사로 변신하기 위해 앞으로 수년간 총 600억 유로를 투자한다. 독일은 미국, 일본과 같이 2050년을 무공해자동차(ZEV) 시대 원년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렇게 전기차 시대가 바짝 앞으로 다가왔다. 전기차 시장은 2015년 이래 중국시장을 선두로 연평균 54% 성장했다. 전기구동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스포츠카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다. 폭스바겐의 계열사 포르쉐는 최초의 포르쉐 전기차 타이칸을 얼마 전에 내놓았는데 시속 100킬로미터까지 2.8초가 걸린다. 최고 주행 속도는 시속 260킬로미터. 내연 포르쉐 모델들의 최고 시속이 316킬로미터 안

팠다.

스포츠카의 지존인 이탈리아의 페라리도 2025년을 목표로 전기차를 본격 개발하고 있다. 페라리는 전기차가 소극적이었다가 2019년에 처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내놓았고 같은 해 전기차 기술특허를 유럽특허청에 제출했다. 페라리가 이제 생각을 바꿔 테슬라의 로드스터에 도전하는 것이다.

전기차의 선구자 테슬라는 2019년 말부터 추가폭등으로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1위의 자동차 회사가 되었다.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어려운 이유들 중 하나로 심리학자들은 운전자의 정체성 문제를 든다. 환경 의식과 열리어 답답 개성이다. 이른바 '착한 척'과 튀는 이미지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전기차를 망설인다. 실명이다. 변속기가 없는 전기차는 스포츠카 자체의 정체성과도 잘 맞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제 그 생각조차 바뀌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가 전기차를 출시한 것이 2011년이다. 이후 국내외에서 모두 28만여 대를 판매했다. 2020년 1분기에는 총 24,116대를 판매했는데 테슬라(88,400대), 르노-닛산(39,355대), 폭스바겐(33,846대)에 이어 글로벌 4위로 선전 중이다. 누가 전기차, 나아가 플러그인카의 최강자가 되는가는 배터리에 달려있다고들 하는데 최근 현대차와 LG, 삼성, SK의 최고경영자들이 잇달아 회동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협력을 논의해 화제가 되었다. 현대차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국내 배터리 3사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공장을 다 둘러보고 기술정보를 공유한 후 미래 신기술 개발 방향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츠비카우에는 슈만 기념관과 함께 호르히(Horch) 기념관이 있다. 호르히는 아우디의 창업자다. 평생 운전면허가 없었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아우디라는 브랜드 이름은 그 아들의 아이디어였다. 기념관은 옛 아우디 공장 자리에 있다.

아우디는 1958년에 당시 다임러-벤츠의 계열사가 되었다가 1965년에 폭스바겐에 인수된 회사다. 폭스바겐은 토요타에 이어 이제 근소한 차이로 세계 2위 자동차 회사다. 먼 훗날 츠비카우가 독일 전기차의 성지가 되어 폭스바겐의 전기차 박물관이 들어서 될 지도 모른다.

## 社 說

###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

정부가 여당이 서울 주택공급 확충 방안의 하나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획기적 공급 확대 없이 수요 억제만으로는 집값 불안정을 잡는 데 한계를 느끼고 공급확충 방안을 찾는 것이다. 사실 그린벨트 해제 카드는 다른 대안과 비교할 때 서울의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물량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구 1천만 대도시의 허파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지극히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정부가 내놓은 7·10 부동산 대책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신규택지 발굴'이라는 표현만 있을 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

도시 밀도 개발 규제개선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 재개발·재건축 추진 등 공급확충 방안의 윤곽만 제시됐다. 하지만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공급 효과가 미미해 시장의 반응을 싸늘하게 만든 정부의 정책 방향이 묻어났다. 당정이 혼선 끝에 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공식화한 것도 이런 배경에 맥이

달아 있을 것이다. 서울 주택시장에 공급 확대 시그널을 확실하게 주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검토 카드를 꺼냈지만, 그린벨트 해제가 실제 정책으로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서울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다.

판교신도시 사례에서 보듯 오히려 서울 집값만 올랐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린벨트는 시민의 휴식공간이고 오염에 찌든 대도시를 정화하는 거대한 허파다. 한 번 훼손하면 다시는 복원할 수 없다. 그린벨트를 풀어 집을 지으면 서울 집값도와 편의성만 높아져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어긋나는 지적도 있다.

물론 그린벨트가 성역일 수는 없다. 그린벨트의 순기능을 압도하고도 남을 사회적 가치가 있다면 해제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그린벨트가 성역은 아니더라도 미미해 시장의 반응을 싸늘하게 만든 정부의 정책 방향이 묻어났다. 당정이 혼선 끝에 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공식화한 것도 이런 배경에 맥이

####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알콜음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 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p>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간)</p> <p><b>호남신문</b></p> <p>대표전화 (062) 229-6000</p> <p>광고국 (062) 224-5800</p> <p>기사제보 (062) 971-7400</p> <p>팩스 (062) 222-5547</p>	<p>회 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p> <p>편 집 국 장 직 무 대 리 서 선 옥</p> <p>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p> <p>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p> <p>Tel (02) 2238-0003</p> <p>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p> <p>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p> <p>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	--

###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피서지 출입통제 나름 이유 있어

최근 코로나19 여파에서도 참기 힘든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가까운 하천, 계곡을 찾는 물놀이객이 증가하고 있는데 매년 수영금지구역에서 물놀이 중 안타깝게 인명피해를 입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상당수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수영금지구역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수영금지 표지

판을 무시하고 위험한 물놀이를 즐기는 경우도 있어 자칫 소중한 인명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름철 안전사고는 과도한 음주와 물놀이 금지구역에서의 수영행위 등 안전수칙 불이행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23개 병원 응급실을 찾은 익수 사고 673명중 약47% 가량이 여름철인 6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

했다고 한다. 물놀이 금지구역은 수심이 깊거나 익사사고가 자주 발생해 사고의 개연성이 높아 피서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곳이다.

수영금지구역 경고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대체로 수심이 깊어 사망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가족과 지인들이 들어가는 것을 절대로 방지해서는 안 된다.

경찰에서도 수영금지구역에서의 물놀이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안전구역으로의 이동을 유도하고 있지만 한정된 경찰력으로 넘쳐나는 수영금지 구역에서의 피서객을 감당하기는 버거운 실정이다.

올 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관련 기관에서도 그 어느 해보다 물놀이 안전관리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피서객들 또한 안전하고 편안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무모한 물놀이 금지구역에서의 수영을 하지 않는 한편 익수사고에 대비해 사전 운동 및 안전장비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의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수영금지구역 표지판 설치지역에서는 수영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